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3-16】

2013. 12. 13.

3중전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 및 시사점

목 차

I. 18기 3중전회 의의	1
II. 주요 경제개혁 추진배경 및 내용	2
III. 향후 전망 및 시사점	6

국별조사실

작 성: 조 사 역 유재준 (3779-5716)
jjyu@koreaexim.go.kr
확 인: 실 장 이한구 (3779-5702)
hkleee@koreaexim.go.kr



■ '13년 초 출범한 중국의 신지도부는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 '13년 11월 9~12일 개최)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발표함. 이에 18기 3중전회 의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배경 및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I. 18기 3중전회 의의

□ 중국 신지도부의 10년간의 정책 방향 설정

- 신지도부는 임기 10년 동안 7차례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3중전회는 향후 10년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임.
- 역대 중국 정부는 3중전회를 통해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고 WTO에 가입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혁 정책과 방향을 제시함.

<표1> 주요 3중전회 개요

구 분	시 기	주 석	주요 경제정책 내용
11기	'78.12	덩샤오핑	개혁개방 시범도입
14기	'93.11	장쩌민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WTO 가입
16기	'03.11	후진타오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 제시
18기	'13.11	시진핑	시장주도의 경제성장 방식으로의 전환

- 신지도부는 '12. 11월 전국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으며 '13. 2월까지 정부직 인선 및 주요 기구 개편을 마무리하여 정부 운영을 위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함.

<표2> 18기 신지도부 출범 이후 주요 회의

시 기	'12.11	'12.11	'13.2	'13.11
회의명	전국대표회의	1중전회	2중전회	3중전회
참석자	지역별 당대표 2,270명	중앙위원 205명, 후보위원 171명		
내 용	- 18기 중앙위원회 구성 - 주석 및 총리 선출	- 기구 개편 및 인선		- 정책 방향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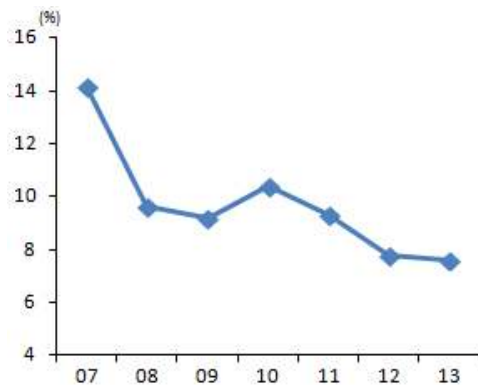


II. 주요 경제개혁 추진배경 및 내용

□ 새로운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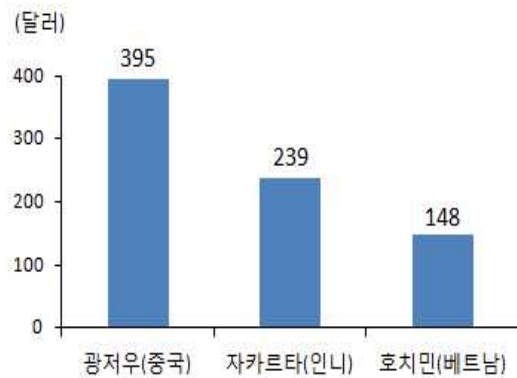
-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 성장정책으로 '12년 GDP 약 8조 2,210억 달러 (1위 미국: 16조 2,44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제2의 경제대국으로 변모하였으나, 기존 정책이 한계에 봉착하여 경제성장률이 '07년 14.2%에서 '13년 7.5%로 둔화되고 빈부격차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함.
- 고정자산에 대한 과잉투자로 유희설비 증가, 설비 가동률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매년 10%를 상회하는 임금인상¹⁾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저하됨.

<그림1>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그림2> 월 평균임금 비교



자료: JETRO('12년)

- '78년 등소평이 선부론²⁾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한 이래,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진 동부지역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렸으나, 중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음. 빈부격차 지표인 지니계수 또한 위험수준(0.4 이상)인 0.474('12년 기준, 중국통계국)를 기록함.
- 신지도부(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는 개혁·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내수·소비 중심의 성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13년 초 출범이후, 인위적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있으며, 철강·조선업 등 주요 기간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함.

1) 중국의 월평균 임금은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임. '12년 기준, 광저우 395달러, 자카르타 239달러, 호치민 148달러

2) 선부론(先富論): 일부 지역이 부유해진 후, 이를 확산시키는 이론



□ '점진적 개혁을 통한 안정적 성장' 노선 채택

- 토지개혁을 통한 중서부지역 도시화 발판 마련 및 빈부격차 해소, 시장 개방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및 효율화 등을 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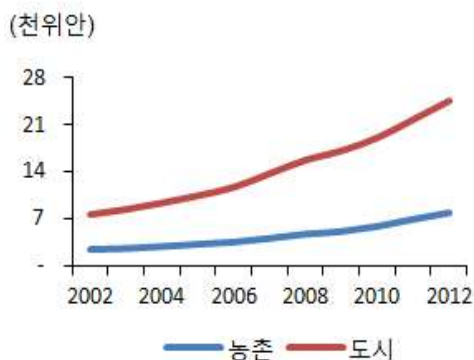
<표3> 3중전환 경제부문 관련 주요 정책 내용

부 문	내 용
토 지	- 농민의 재산권(토지소유권) 보호제도 개선 - 도시와 농촌의 토지시장 일원화
금 융	- 금융시장 대·내외 개방 확대 * 직접금융시장(주식, 채권) 확대, 자본시장 개방 등
국유기업	- 국유기업 수익의 30%를 공공재정으로 환수
시 장 화	- 석유, 전력 등의 시장가격 결정체계 개선 - 자유무역지역 건설 가속화

□ 토지개혁을 통한 공평한 분배 및 내수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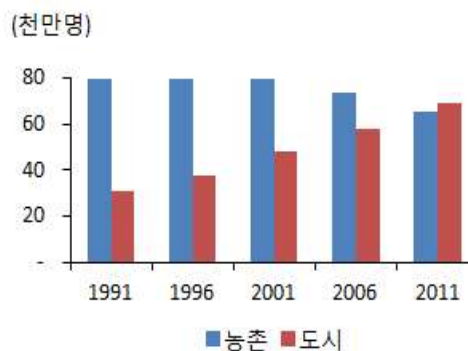
- (현황) 개인의 토지 소유와 매매가 허용되는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는 지방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농민은 경작권만을 소유하는 구조임. 토지개발 시, 지방정부가 농민들의 토지 경작권을 몰수하고 개발 이익을 독점하여 빈부 격차가 심화됨.
- 도·농간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12년 기준)은 농민과 도시민이 각각 7,917위안과 24,565위안으로 소득격차가 3배 이상임.

<그림3> 1인당 연간 가처분 소득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그림4> 농촌 및 도시 인구수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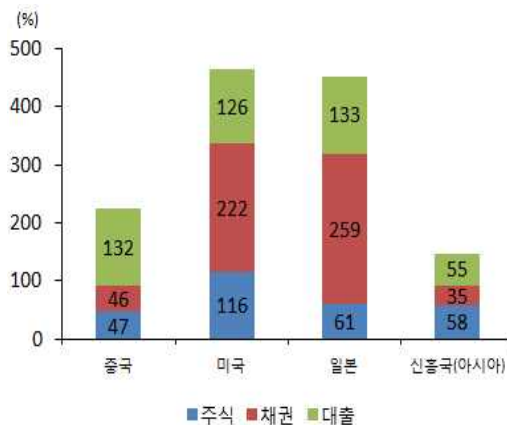


- (개혁안) 농민의 토지 소유와 매매를 허용하고 도·농간 토지시장을 일원화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유도하여 신정부가 추구하는 내수·소비 중심의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함.
- 금번 개혁안에 따라 향후 농민도 토지 매매 및 개발 이익을 공유할 것으로 보이며, 도·농간 토지시장 일원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촌 투자가 활성화되어 농민 소득 증대에 따른 도·농간 소득 격차 완화가 예상된다.
- 또한 중국 전체 인구의 48.7%(‘11년 기준)를 차지하는 농민의 소득 증대에 힘입어 내수·소비시장이 큰 폭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시장 개혁을 통한 조달방식 다양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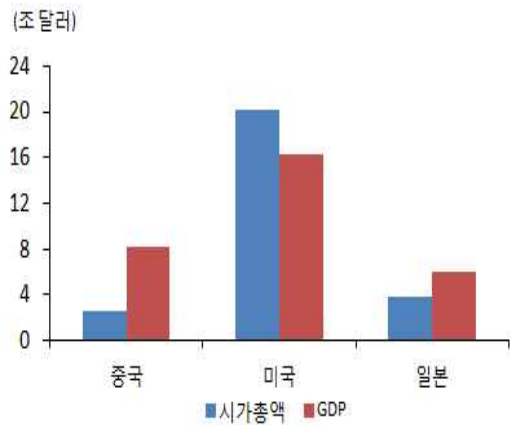
- (현황) ‘13년 2분기 기준, 중국의 직접금융시장(채권 및 주식시장, 각각 GDP의 46%, 47%) 조달 비중은 간접금융시장(대출시장, GDP의 132%) 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는 미국의 채권 및 주식시장 조달 비중인 GDP의 222%, 116%와 일본의 259%, 6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국가 주도의 금융자원 배분으로 국유기업 앞 대출이 높으며, 자본시장 규제 등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중국 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GDP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5> GDP대비 금융시장별 비율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그림6> 주요국 증시 시가총액



자료: 한국거래소(2013년 3월말 기준).

- 자본조달시장이 대출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규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06년 이후 비은행권을 이용한 그림자금융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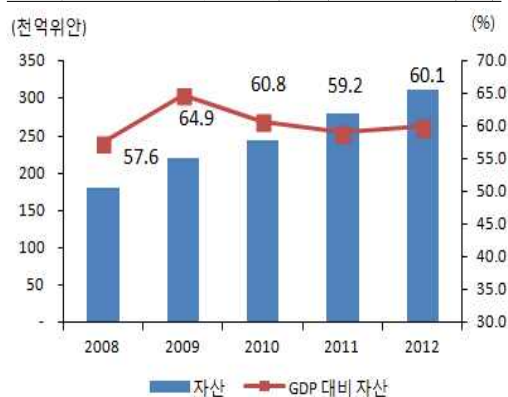


- (개혁안)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를 통해 직접금융시장 비중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대·내외 개방도를 높여 나감.
 - 현재는 소수의 기업만이 신주발행(IPO)을 통한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신주발행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심사 절차를 줄이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위안화 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채권 조달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국자본의 중국시장 투자한도와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허용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자본시장 대·내외 개방도를 높여갈 것으로 기대됨.

□ 국유기업 개혁 정책을 통한 독점이익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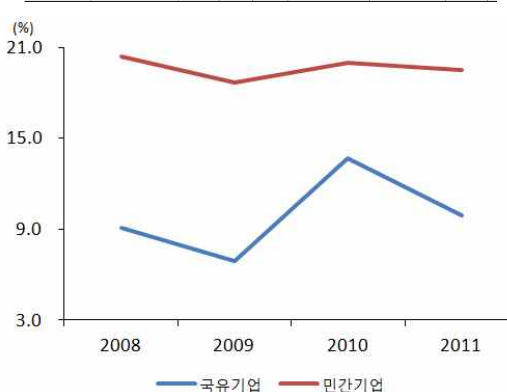
- (현황) 중국 중앙정부 소속 113개('12년 기준) 국유기업은 GDP의 약 60%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음.
 - 중국 국유기업은 전력, 천연가스, 석유 등 기초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존재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동차, 이동통신, 방직, 여행업, 보험 등 대부분의 시장에 진출하여 민간기업의 성장을 저해함.
 - 부가가치 증가율을 살펴보면 민간기업은 18~2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반해, 국유기업은 7~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요구됨.

<그림> 중앙 국유기업 자산 규모 추이



자료: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그림8>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3) '06년 이후, 전체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24.3%를 기록하였으나 비은행권 대출은 연평균 41.4% 증가하였음.



- (개혁안) 국유기업의 이익 중 30%를 환수하여 공공재원으로 활용하고 혼합소유제를 도입하여 국유기업의 지분을 민간 및 외국자본에 매각할 예정임.
- 향후 민간 및 외국자본의 국유기업 지분 취득 허용 범위 및 시기가 시장의 관심사이며, 급진적 민영화보다는 점진적 지분 개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 하지만 국유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다수 기득권층의 반발이 예상됨.

Ⅲ.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단기적 경제성장률 둔화 이후 안정적 경제성장 기대

- 신지도부의 내수·소비 중심 경제 성장 기조 하에, 인위적 경기부양 자체가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⁴⁾ 둔화가 전망됨.
- 과거 중국은 투자 중심 성장 모델 하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을 통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여 고정자산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가계지출⁵⁾ 대비 월등히 높은 편임.

<표4> '12년 지출별 성장 기여도(%)

국 가	가계지출	고정자산투자
중 국	35.7	46.1
한 국	53.5	26.7
브라질	62.3	18.1
인 도	60.2	29.6
러시아	48.1	22.0

자료: World Bank.

- 개혁 정책을 통한 농민의 소득증가와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독점 이익 분배는 내수·소비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계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상승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전망됨.

4) 경제성장률 예상 추이 (IMF): '11년 9.3%, '12년 7.8%, '13년(예상) 7.5%

5) 1인당 GDP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12년 중국의 가계지출(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35.7%로 브라질의 62.3%, 인도의 60.2%, 한국의 53.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토지개혁으로 중서부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 필요

- 컴퓨터·에어컨 등 가전 시장의 경우 향후 농민 비율이 높은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시장 공략 모색이 가능함.
- 또한, 중서부지역 개발 확대에 따라 철근 등의 건설기자재 분야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우리 기업의 관심이 요망됨.

<표5> '11년 내구소비재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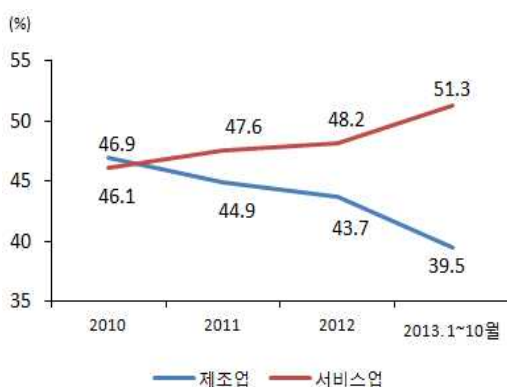
품 목	농촌	도시
컴퓨터	18.0	81.9
에어컨	22.6	122.0
세탁기	62.6	97.1
냉장고	61.1	97.2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우리 기업의 서비스업 진출 가능성 확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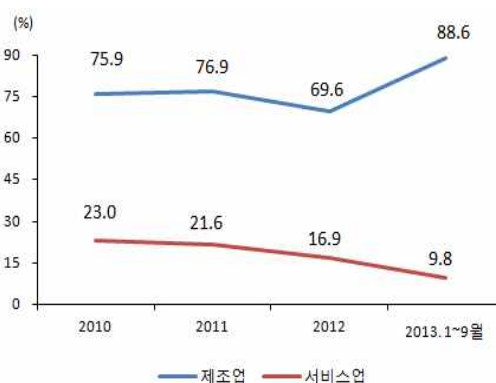
- 전 세계의 대 중국 FDI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의 투자 비중이 높아 중국 서비스업 시장 공략이 필요함.
- 전 세계의 대 중국 FDI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각각 51.3%, 39.5%('13. 1~10월 기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제조업 88.6%, 서비스업 9.8%임 ('13. 1~9월 기준).

<그림9> 대 중국 FDI 비중(세계)



자료: 중국 상무부.

<그림10> 대 중국 FDI 비중(한국)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소득 증가와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의료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한류 열풍과 중서부지역 도시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 등으로 문화콘텐츠 및 물류 분야 등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금융업의 중국진출 확대 기대

- 중국 정부는 RQFII⁶⁾, QFII⁷⁾ 등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으며 최근 중국 투자자의 외국계 헤지펀드 투자를 허용함. 3중 전화 이후 내·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등의 자본시장 개방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됨.

<표6> 자본시장 개방 내용

체 도	투자한도	
	초기	현재
RQFII	200억 위안('11. 12월)	2,700억 위안('13. 7월)
QFII	56억 달러('05. 12월)	1,500억 달러('13. 7월)
QDLP ⁸⁾	중국 투자자의 외국계 헤지펀드 투자 허용('13. 9월)	

- 우리 금융기업은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시책을 적극 활용하여 주식 및 채권 등 유통시장에서의 영업 확대를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 허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조사역 유재준 (02-3779-5716)
 jjyu@koreaexim.go.kr

6)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홍콩 소재 금융사들이 위안화 표시 상품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 A주(중국인 투자전용 주식)증권 시장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요건
 7)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상하이와 선전 주식시장에서 A주(중국인 투자전용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외국 투자기관
 8) 적격국내유한책임투자자제도(QDLP):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에 등록된 외국계 헤지펀드의 위안화 자금 유치 및 해당 자금의 해외 투자 허용